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편의점협회, 야간 가격할증 결국 없던 일 “역풍 우려”

편의점 점주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연계해 야간할증과 공공기능 거부 등 압박카드를 검토하다가 결국 최종 성명에서 제외했다.

전국편의점주단체협의회(전편협)는 12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통해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은 이미 운영한계에 달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서 전편협은 ▲최저임금 동결 ▲신용카드 수수료 구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 ▲최저임금 업종별차등화 재논의 등을 요구했다.

전편협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 편의점에 호소문과 현수막을 부착하고 7만개 점포 동시 휴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부터 논란이 됐던 야간할증 등 다소 극단적인 제스처는 결국 기자회견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전편협은 이날 기자회견에 최저임금 관련 요구가 관

편의점협회, 최저임금 동결 등 요구 기자회견
최저임금 인상시 7만개 점포 동시휴업 압박
야간 10~20% 가격인상 적극검토했다가 제외

철되지 않을 경우 ▲야간 시간대 10~20% 가격 인상 ▲교통카드 충전 등 공공기능 거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할 예정이었다.

특히 전편협은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이 추진될 경우, 생존권과 지불능력 확보를 위해 야간 시간대 상품 및 서비스 판매가를 10~20%를 인상하는 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안을 막판까지 검토했다.

또 종량제봉투 판매 및 교통카드 충전과 공병 매일, 공공요금 수납 등 편의점의 공공기능을 단계별로 축소 및 거부하겠다는 입장도 준비했다.

그러나 야간할증과 공공기능 거부에 대해 상당수 구성원들이 난색을 표하면서 결국 최종입장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점 본사와 협의를 거쳐야할 문제인데다가,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고통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한다는 역풍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서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국민을 볼모로 잡는 노동조합 등의 부쟁이 역풍을 맞고 힘을 잃었던 많은 경험이 있지 않느냐”며 “점주들 내부에서도 이런 우려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자회견에 포함됐더라도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그대로 압박카드도 위협 가능성이 높았다”고 덧붙였다.

다른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편의점 점주들이 휴업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 부분도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며 “다만 동시휴업까지 등이 거론된 것은 편의점 점주들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제스처로 봐달라”고 말했다.

뉴스

‘야간할증’ 해프닝에 놀란 편의점업계...“오죽했으면”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가 야간에 물건 가격을 5%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가 취소하는 해프닝을 겪었다. 업계에서는 그렇게 가격을 올리는 것 자체

가 가능하지 않다면서도 “오죽했으면 그런 극단적인 방안까지 거론했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계상혁 가맹점협회 회장은 한 언론을 통해 오후 10시 이후부터 새벽 6시까지 물건 값을 5% 올리는 이른바 ‘야간할증’을 도입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전날 최저임금심위원회에서 업종별 차등 방안이 부결된 뒤, 차등적용 방안의 수혜업종으로 꼽히는 편의점 업계에서 나온 대응 방안이라 큰 주목을 받았다. 소비자들이 등에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 더욱 반향이 컸다.

편의점가맹점협 ‘야간 인상’ 거론했다 철회
편의점 업계 “그런 가격인상 가능하지 않다”
“오죽하면 그런 극단적인 말까지...” 분위기

그러나 협의회는 몇시간 뒤 업계에 “공식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계 회장 역시 “개인적인 말이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했다.

야간할증 논란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업계에서는 상당히 놀란 분위기다.

편의점은 원칙적으로 점주들에게 가격결정권이 있을 수 있지만, 편의점 본사와 아무 협의없이 가격을 올릴 수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CU, GS25 등 편의점 본사들은 점주들이

‘야간할증’을 제안했다더라도 현실화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가격문제는 워낙 민감해 본사입장에서는 정부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정책적으로 면밀히 살펴야하기 때문이다. 그런식으로 가격을 인상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거나, 정부의 제재를 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이대로 최저임금 인상이 진행된다면 생존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다보니 다소 극단적인 말까지 나온 것 같다”고 밝혔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점주들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본사와도 협의를 당연히 한다”며 “본사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맹점주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다 보니 나온 해프닝으로 봐달라”고 덧붙였다.

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